광주지역 학교부패인식 지수 감소

시교육청, 촌지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比 4.5% 감소 2.1%…중학교 가장 낮아

광주지역 초·중·고 학부모의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존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학교부패인식 지수가 6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2017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학교부패인식 지수가 지난해 6.6%보다 4.5%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학부모 학교부패인식 지수는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처음 시행한 2011년에 23.3%였으나 청렴 정책으로 2012년 15.1%, 2013년 12.4%, 2014년 10.1%, 2015년 5.3%, 2016년 6.6%에 이어 올해 2.1%까지 낮아졌다.

학교급별 학부모 학교부패인식은 초등학교가 1.9%, 중학교 1.2%, 고등학교 3.6%로 중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촌지 및 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98.3%가 '없음'으로, '찬조금 제공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7.9%가 '없음'으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전화면접 설문조사에서 면접원에게 "교사·학부모 모두 촌지풍토 인식이 크게 변했다", "(촌지를)제공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스승의 날에는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성의를 표할 수 있기 바란다", "교사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전화면접을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RDD)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초·중·고 학부모 700명이고 응답률은 53.5%(전체 대상 1309명),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7%포인트다.

조인호 기자

"연공서열 무시" 광주시 인사 뒷말

광주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연공서열이 무너졌다", "6개월짜리 서기관 전보가 수두룩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5급 이상 간부 67명을 비롯해 203명(지정대리 2명 포함)을 승진시키고 4급 이상 57명을 새로운 자리로 전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하마평에도 없던 이종환 공무원교육원장이 2급 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원장은 2015년 1월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이사관급 승진 최소소요 연한(2년)은 넘겼지만 연공서열, 평점, 보직경로 등이 죄다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 말년 대표적인 한직에 있다가 최고위직으로 승진한 것이어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돌고 있다. 2급 전보를 두고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신기 의회 사무처장의 유임을 주장하면서 인사 발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입살에 오르기도 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 일부 준국장급을 비롯해 6개월만에 교체된 서기관만도 20여명에 달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부서 4, 5, 6급이 줄줄이 승진하는 등 일부 부서의 '승진잔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진은 경력과 서열, 업무 성과, 격무·기피부서 장기근속자, 직렬별 승진 형평성, 대외 평판 등을 중시했고, 4급 이상 전보는 도시철도 2호선과 수영대회의 차질없는 준비, 미래 먹거리 육성, 전문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가뭄의 흔적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저수율에 변화를 보인 9일 오전 경기 용인 이동저수지가 평년대비 30.6%를 기록하며 비교적 물이 차올라 있다.

'청렴은 어디로' 뇌물 국가 세무공무원들 잇단 실형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세무공무원들이 세금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성실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청렴성·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세금 혜택 등의 편의 명목과 함께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남의 한 세무서 소속 간부 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4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비난가능성이 높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중 3000만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타 직원 전별금, 병원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300만원을 의약품 도매업자와 광주 모 병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와 함께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A씨는 뇌물수수 당시 광주국세청 간부로 재직중이었다.

세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병원 측과 공모한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B(62·전 세무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10월께 광주 한 병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관련, 세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병원 측과 공모한 C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광주 모 세무서 간부공무원이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 세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같은 공무원의 수뢰는 일선에서 성실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에는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국세청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거문도 해상서 다이빙 마친 30대 여성 숨져

9일 오전 9시6분께 여수시 거문도 등대 앞 해상에서 다이빙을 마친 A(37·여)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씨가 바다에서 다이빙 후 올라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거문안전센터 경찰관, 거문도 보건지소장 등이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A씨는 응급처치 당시 경미한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전 10시11분께 거문도 보건지소장이 함께 탄 서해본부 항공단 헬기로 10시50분께 순천의 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폐소생술 중 회생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여수해경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순천 주택서 방화 추정 화재…20대 전신화상

9일 오전 2시 40분께 순천시 매곡동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모자와 안면이 있는 A씨가 인화 물질을 뿌린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대 황 모(26) 씨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곁에 있던 황 씨의 40대 어머니도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소방서는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차 15대와 소방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오전 3시 2분께 진화했다.

순천경찰서와 순천소방서는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안개 속 표류 선박 구조하고 보니 음주운항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선박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선장이 음주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30분께 완도군 망석리 인근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A호(1.51t, 승선원1명)가 짙은 안개와 플로터 고장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한 해경은 20분만에 A호를 발견, 완도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과정에 A호 선장 이모(50대)씨의 행실과 말투를 수상히 여긴 해경은 음주 측정했다.

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인 상태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씨를 음주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제41조 위반)로 입건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개인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일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렌터카로 고의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덜미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하고, 한모(21)씨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4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렌터카 2대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1월14일부터 9월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뒤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 오토바이, 개인 소유차량 등을 이용해 고의로 추돌·접촉사고를 내고 치료비·차량수리금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차량 1대에 최대 인원인 5명이 타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소를 특정한 뒤 "신호대기 또는 우회전 중 추돌 사고를 내라"는 방식으로 공모했으며, 7차례의 사고 중 5차례는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